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의미

남북의 민간차원에서 치러진 공동행사,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 열린 장관급회담과 그 결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교류도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어려운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농업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통일농수산사업단의 북한 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여져, 이번호에 삼일포협동농장 사업에 대한 소개글을 통일농수산사업단에 요청하게 되었다.

한농연 또한 남북농업·농민교류를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의 사업방향도 가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태현 (사)통일농수산사업단 기획운영국장

남북이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일포협동농장의 시험적 시도와 작은 변화들이 새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에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업교류협력의 모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포협동농장의 남북관계자들은 향후 이곳의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통일농수산업의 청사진을 그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일포협동농장이 위치한 곳은 강원도 북고성군 삼일포읍 인근 지역. 이곳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차

량으로 불과 1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북이 공동영농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분단이후 5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개방하고서도 주변의 협동농장은 여전히 '주체농법'과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 속에 달혀 있었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이 바로 이곳, 가깝고도 먼 삼일포협동농장에 남북농업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통일농수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 사업을 전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북측은 90년대 말의 대홍수와 가뭄, 미국의 경제봉쇄 등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발표하는 등 농업분야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농업관리방식'을 모색하고 있던 시점이다.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은 이처럼 시작단계부터 심상치 않은 북측의 태도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의 확대 과정에서도 북측의 농업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북측은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자혁명과 두벌농사(이모작), 관리제도 개선 등을 강조해 왔으며, 올해에는 경제분야의 핵심(주공전선)으로 농업분야를 선정했다. 나아가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북한이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이 남북당국의 교류협력의중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실증사례의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은 이 같은 북측의 정책기조를 가능케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개방식과 내용에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대북지원사업과는 차이를 보여 왔다. 우선 첫째에는 조사연구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이듬해는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3년차인 올해는 전년도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퇴구축과 성과중심의 사업전개 방식, 그리고 중장기 협력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중점사업으로는 ▲수도작 생산증대(500ha) ▲밭작물 생산증대(180ha) ▲농업기계화 수준제고 ▲공동협력시범사업 ▲농업기반 강화 ▲축산기반 조성 ▲경제사업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협력시범사업으로는 △벼종자 시험재배(1,500평) △하우스육묘 및 기계이앙 시범사업(6,000평) △친환경 벼농사 시험사업(1,500평) △2004년 우수종자 확대 시범재배(30,000평) △보리 두벌농사 확대 시범재배(120,000평) △비닐하우스 시범재배(1,000평) 등이 시도되고 있다. 농업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복합미생물 및 액비 공장 △농기계수리 및 보관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며, 축산기반 조성사업에는 양돈장 확대사업, 그리고 경제사업분야로는 △잡곡 △터덕 △감 △장뇌 △송이 등의 저장·가공·판매와 관련된 기술 및 마케팅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봉사단, 그리고 농업관련 회사들이 공동으



로 참여하고 있다. 수도작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전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강화사업의 양돈장은 (주)도드람 복합미생물 및 액비공장은 (주)흙살림, 농업기계화 사업에는 (주)국제종합농기계와 익산농기계 비닐하우스 시범재배는 (주)한터, 공동시범사업에는 (주)동부한농, 그리고 경제사업분야에는 품목별 전문유통인과 백화점이 협력사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점사업은 협동농장 단위의 종합적인 영농사업이라는 방향에서 설계되었으며, 공동작업과 기술교류를 통한 투명성과 기술축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범재배를 통한 성과를 기반으로 단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협력과 비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은 향후 영농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프로그램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남북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비료·식량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을 개발협력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

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오는 7월에는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운영하기 위한 실무회담 성격의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예상되었지만 당혹스런' 농업교류협력의 물결이 급작스럽게 흐르고 있는 셈이다. 혹 이전의 경험을 들어 이같은 변화를 폄하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변화무쌍(?)하게 돌변하는 북측의 태도 역시 일관되게 추진되는 농업정책의 틀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인들도 남북농업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변화에 대해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미국산과 중국산, 그리고 북한산 농산물이 우리농업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독일의 통일비용을 들어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분야의 북한 부메랑 효과를 걱정할 것인지, 아니며 시대의 소명으로 주도할 것인지 곰곰이 따져야 할 시점이다. 어떤 경우이건 주체는 우리농업인들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식의 냉소적인 태도는 옳지 않은 듯하다. 최근 주목받는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